OUR OCEAN
Busan, KOREA, 28-30 April 2025

KOREA BLUE ACTION PLAN

한국의 지속가능한
해양 행동계획

해양수산부

KOREA
BLUE ACTION PLAN

대한민국의 핵심 공약

76개의 도전적인 **행동**

대한민국은 1996년 해양수산 통합행정 체계를 구축한 이후, 종합적인 해양정책을 통해 해양의 보존과 이용 간의 조화를 실현해왔다. 30년을 이어온 해양수산 정책역량과 과학기술력을 토대로 대한민국은 지속가능한 해양의 선도사례를 만들고자 노력해왔다.

이러한 배경하에, 대한민국은 제10차 아워오션 컨퍼런스를 개최하며, 기후변화, 지속가능어업, 해양경제, 해양오염, 해양보호구역, 해양안보 6가지 영역 전반에 걸친 **3조 7,593억원(약 26.5억달러)** 규모, **76개의 도전적인 행동**을 담은 **Korea Blue Action Plan**을 발표한다. 대한민국은 이를 통한 성과를 전세계에 공유·확산하여, 전세계 지속가능한 해양의 실현과 인류가 직면한 현안 해결에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성장한 유일한 국가로서 그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

전 세계 해양보호구역 논의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국제사회는 2030년까지 전세계 바다의 30%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자는 목표를 수립한바 있다. 대한민국은 지난 2025년 3월 공해상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BBNJ 협약을 전세계 21번째이자 동아시아 최초로 비준하였다.

대한민국은 올해 관탈도, 서해 중부 무인도서의 주변해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국내 해역에 대한 보호구역 지정도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다. 국제적으로는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남태평양지역수산기구(SPRFMO), 북태평양수산기구(NPFC) 등 지역수산관리기구(RFMOs)를 통한 해양보호구역 논의에 적극 기여할 것이다.

해운 친환경 연료 전환 및 글로벌 친환경 연료 공급망 구축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해운·조선 강국으로서, 물류 운송 전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없는 '녹색해운항로'를 구축하기 위해 세계 각국과 협력해 나갈 것이며, 국제해운의 친환경 연료 전환 및 글로벌 친환경 연료 공급망 구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대한민국은 수소·암모니아 등을 연료로 하는 친환경 선박 기술을 개발하여 상용화하고, 친환경 연료 공급 기반을 확충하여 해운의 탈탄소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전기복합 및 LPG 추진 저탄소 어선 건조 기술을 개발하여 상용화함으로써 수산·어업분야에서의 탄소 감축도 추진할 예정이다.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한 글로벌 투명성 헌장*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단계적 이행에 노력할 것이다.

지속 가능한 어업은 선박관리 및 어업행위, 그리고 수산물 유통의 투명성까지 이어지는 광범위한 영역에서의 글로벌 협력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아시아 유일의 국제 불법어업 근절 행동연합(IUU Fishing Action Alliance)의 일원으로서, 2023년 3월 채택되고, 지난 9차 OOC에서 발표된 글로벌 투명성 헌장(Global Charter for Fisheries Transparency)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동 헌장의 전 세계 확대 노력에 동참하고자 한다.

대한민국은 현재 IUU 어업 근절을 위해 갖추어진 법 제도에 더하여, 전자모니터링(Electronic Monitoring, EM) 기술 개발·고도화, 투명한 수산물 유통을 위한 어획증명제도 확대 시행 등 글로벌 어업 헌장의 준수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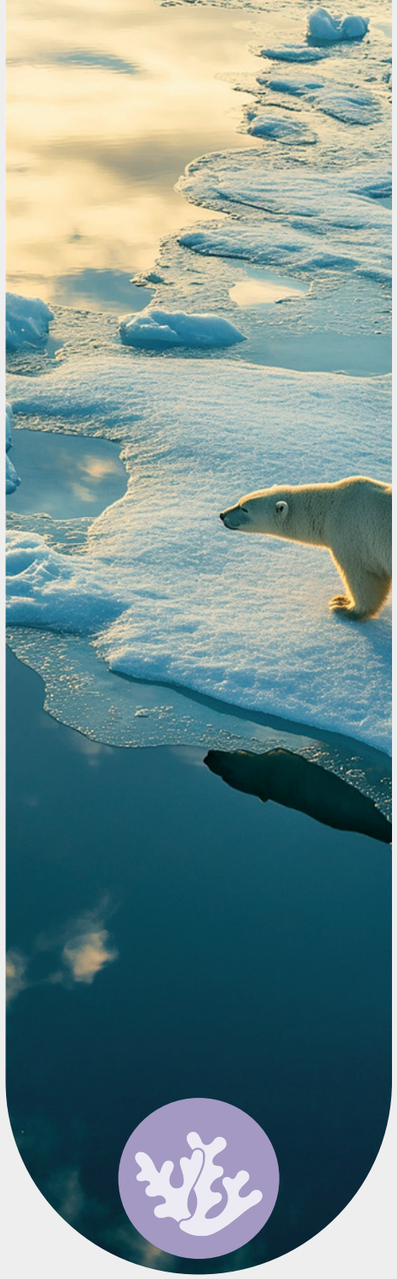
* Global Charter for Fisheries Transparency

해양 플라스틱 오염의 핵심문제 중 하나인 어구에 대한 전주기 관리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폐어구는 해양오염 뿐만 아니라 해양생물의 생명과 선박의 안전에도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2024년 세계 최초로 도입된 '어구·부표 보증금제'를 확대 운영하여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폐어구의 회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어구 유통·사용부터 사용 후 수거, 처리, 재활용까지 어구의 전주기 관리를 강화하여 2028년부터 유실·침적 폐어구 발생 제로화를 달성하고, 수산자원 보호, 해양오염 저감과 함께 선박 운항 안전성 제고를 동시에 이룰 것이다.



기후변화	지속가능한 어업	블루 이코노미	해양오염	해양보호구역	해양안보
1조 110억 원	1조 3,212억 원	1조 1,461억 원	2,514억 원	-	296억 원
29개	**15개**	**14개**	**13개**	**3개**	**2개**

76개의 도전적인 **행동**

3조 7,593억 원

(약 26.5억 달러)

기후변화

해양은 전 지구적인 기후조절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해수온 상승, 해양 산성화, 해수면 상승으로 그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기후조절자로서 해양의 기능을 회복하고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탄소중립을 넘어 탄소 네거티브의 실현과 혁신적이고 장기적인 대응 방안의 마련이 필수적이다.

대한민국은 **해양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4개 목표 아래 1조 110억 원 규모의 29개 행동**을 약속한다.

Climate Change 1.

해양수산 분야 탄소 저감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수소·암모니아 등을 연료로 하는 친환경 선박 기술을 개발하여 상용화하고, 친환경 연료 공급 기반을 확충하여 해운의 탈탄소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무탄소 연료 및 친환경 기술을 활용하여 항만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제로화하고, 항만과 항만 사이 물류 운송 전과정에서 탄소배출이 없는 '녹색해운항로'를 구축하기 위해 세계 각국과 협력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시도를 토대로 대한민국은 국제해운의 친환경 연료 전환 및 글로벌 친환경 연료 공급망 구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부산항, 울산항 등 국내 관문 항만에 수소, 암모니아, LNG 등 친환경 연료 벙커링 터미널을 구축하여 친환경 연료 전환의 전초기지로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양식장 에너지 절감시설을 보급하고 전기복합 및 LPG 추진 저탄소 어선 건조 기술을 개발하여 상용화함으로써 어업분야에서의 탄소 감축도 추진하고자 한다.

(단위 : 억 원, 년도)

공약	예산	완료 시점
01. 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기술 개발	2,540	2031
02. 어업 분야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 친환경 어선 기술 개발	357	2025
03. 친환경 연료 공급 기술 개발 및 국제협력을 통한 녹색해운항로 확산	299	2028
04. 양식장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	185	-
05. 항만 하역장비 무탄소화 전환 지원	75	2027
06. 국내 수소·암모니아 터미널 개발계획 수립	50	2026
07. 친환경 항만 터미널 사업화 방안 마련	13	2027

Climate Change 2.

기후변화 적응 역량을 강화할 것이다.

Argo 등 국제 공동 관측 프로그램의 참여 등을 통해 대양·극지 기후요소의 관측을 확대하고 기후변화 예측 모델을 개발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전지구 해양 환경의 장·단기 예측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해수면 상승에 따른 파랑·침수 등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연안재해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항만시설을 보강하는 등 연안 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고수온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온변화에 강한 양식 품종을 개량하고 스마트 양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한 양식업의 회복력 강화를 위해 고수온 피해에 대한 양식재해 보험 등 관련 정책을 확대 운영할 것이다.

(단위 : 억 원, 년도)

공약	예산	완료 시점
08. 전지구적인 기후변화 예측에 필수적인 남극 해빙 예측 능력 강화를 위해 공동 연구 등 국제사회와 협력	211	2030
09. 전지구 해수면 상승을 유발하는 급격한 남극 빙상 용융의 원인과 그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	428	2031
10.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기후환경변화에 특히 민감한 극지 해양-생태계-해저환경에 대해 연구	455	2026
11. 태풍 등 해양 재해에 대한 예측력 향상을 위해 인도양과 북서태평양 관측 및 기후변화와의 상관관계 규명 연구	394	2026
12. 2100년까지 전지구 해역의 기후변화 시나리오 생산과 기후변화로 인한 월파 관측 기술 개발을 통해 국제사회 기후변화 대응 기여	212	2026
13. 해양 기후변화 감시예측 통합관리체계 구축	28	-
14. 연안재해 위험평가	5	-
15. 재해취약지구 정비사업	798	2026
16. 수산종자산업 디지털혁신 기술개발	355	2028
17. 기후변화대응 신규양식어종지원	6	2028
18. 양식어업재해보험	250	-
19. 양식 등 재해대책비	250	-

Climate Change 3.

다양한 국제개발협력(ODA) 사업을 통해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위성 등을 활용한 기후변화 관측, 해양 에너지 생산, 수산양식 기술 개발, 저탄소 해상교통 시스템 구축 등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며 경험을 쌓아왔다. 대한민국은 이렇게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를 개도국에 전수하며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협력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단위 : 억 원, 년도)

공약	예산	완료 시점
20. 인도네시아의 기후변화 대응과 해양자원 보호에 기여하는 친환경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역량강화 지원	45	2029
21. 피지의 에너지 자급 지원을 위한 남태평양대학교에 해수열을 활용한 에너지 공급시스템 구축 지원	50	2026
22. 마코가이 수산양식연구소 재건 및 공동 연구 등을 통해 피지 기후변화 대응 및 해양수산자원 역량강화 지원	50	2028
23. 인도네시아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해양수산과학 교육센터를 설립하고, 석박사급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	75	2028
24. 스리랑카 해양수산 데이터 전자도서관 설립을 통해 선진국과의 정보격차 해소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해양연구 역량 향상 지원	60	2026
25. 선박온실 가스 배출 규제 대응을 위한 태도국 대상 저탄소 해상교통 촉진 로드맵 수립 및 탄소배출 검증체계 개발 지원	132	2028
26. 맹그로브 숲 생태계 조성과 연계한 베트남 지속 가능한 양식기반 조성 및 양식 기술 역량 강화	30	2026

Climate Change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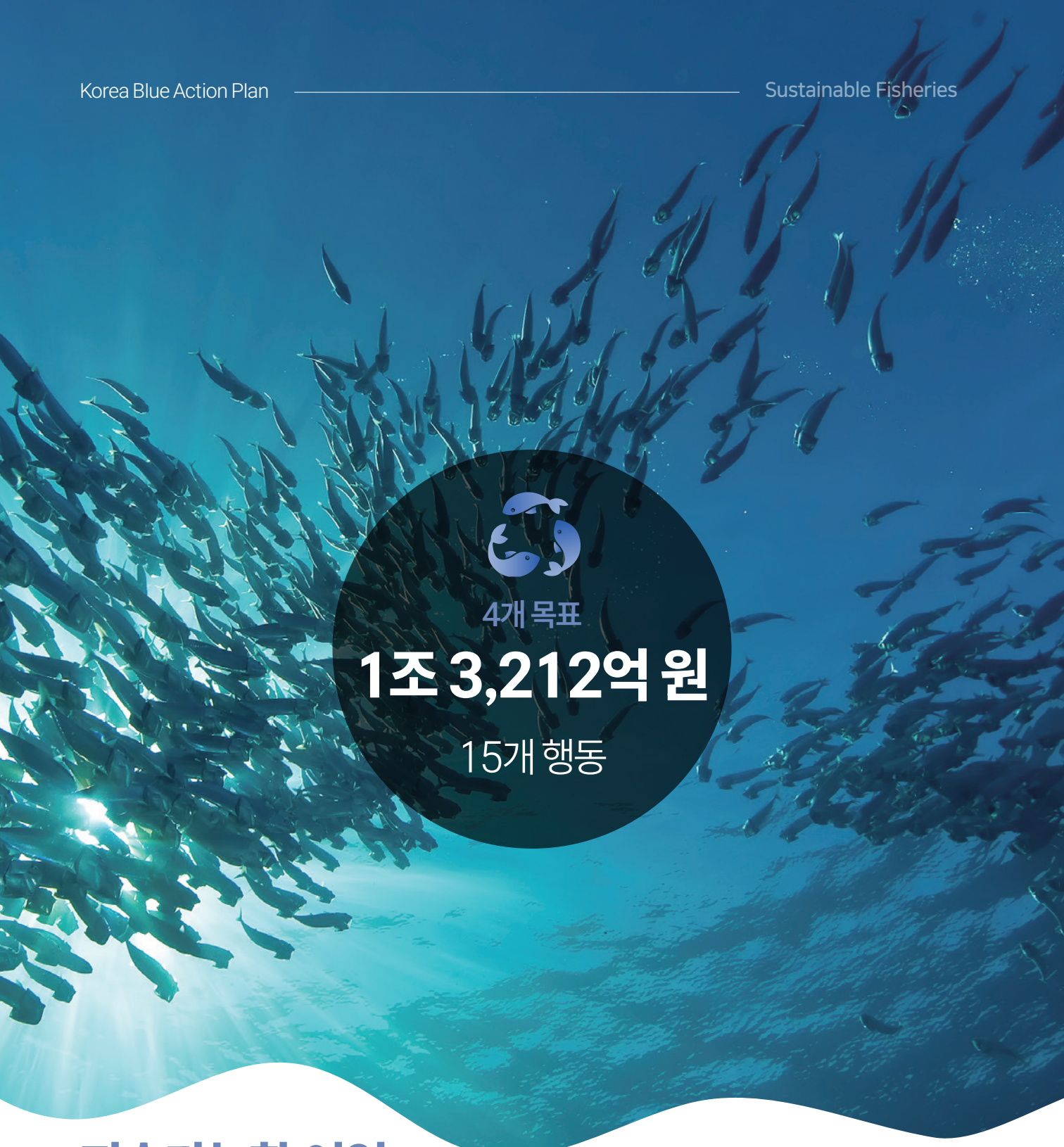
자연 기반의 해양 탄소흡수 능력을 강화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갯벌을 복원하고, 갯벌에서도 잘 자라는 염생식물을 기르며, 바다숲도 조성하여 해양 생태계를 통한 탄소 흡수를 확대할 것이다. 비식생 갯벌·해조류 등의 블루카본 인증을 위한 IPCC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여 세계 각국의 블루카본 조성 및 확대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아울러, 해양 탄소흡수 및 생물다양성 증대를 위해 어항과 해안 침식지역 등을 대상으로 친환경적인 에코타일을 부착하여 해조류 서식처를 조성할 계획이다. 염생식물, 굴패각 등 친해양 소재를 활용하여 파랑 및 유속을 저감하는 '숨쉬는 해안' 조성사업도 시행 예정이다.

(단위 : 억 원, 년도)

공약	예산	완료 시점
27. 2030년까지 전국 연안해역에 바다숲 540 km^2를 조성	1,600	2030
28. 훼손된 갯벌 복원, 식재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전국 갯벌 염생식물 105 km^2 조성	745	2030
29. 블루카본 기반 기후변화 대응형 해안조성 기술개발	412	2026



4개 목표

1조 3,212억 원

15개 행동

지속가능한 어업

전세계 35억명 이상의 인구가 단백질 섭취량의 20%이상을 수산물에 의존하고 있고, 약 6천만명이 수산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가치에 더해, 어촌공동체의 전통어업은 사회문화적 보존의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과도한 어획과 기후변화가 맞물려 수산자원 고갈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열악한 생활·경제 여건과 고령화로 인해 어촌 공동체가 소멸하고, 어촌의 전통지식과 문화도 사라지고 있다. 이에 대응한 책임있는 어업 관리와 어촌 활력 제고가 국제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4개의 목표 아래 1조 3,212억 원 규모의 15개 행동**을 약속한다.

Sustainable Fisheries 1.

책임있는 어업 관리를 강화할 것이다.

IUU어업 감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수요에 맞춘 원양어선 전자모니터링(Electronic Monitoring, EM) 기술을 개발·고도화 할 것이다. 연근해 측면에서도 해양포유류 혼획방지 장치를 개발하고, 총허용어획량 제도를 확대할 것이다. 국제 표준에 부합한 어업 관리 제도 전환을 위한 연근해어업 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 운영할 예정이다.

(단위 : 억 원, 년도)

공약	예산	완료 시점
01. IUU 어업 감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형 원양어선 전자모니터링(Electronic Monitoring, EM) 기술개발	230	2028
02. 연근해어업 중 해양포유류 혼획 방지를 위해 혼획저감장치 개발	31	2026
03. 지속가능한 수산자원관리를 위해 총허용어획량(TAC) 적용 확대	-	-
04. 한국형 어획증명제도 시범운영 및 국제 표준에 부합한 어업관리제도전환을 위한 연근해어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27	2025

Sustainable Fisheries 2.

어촌 공동체 활력을 제고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 현안으로 대두된 어촌지역의 소멸과 인구 고령화,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자원 감소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민간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유통·가공 기술을 통해 수산업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자생력 있는 어촌지역 성장을 지원하고자 한다. 이와 동시에 어촌 지역의 청년 유입을 위한 정책도 적극 추진할 것이다.

또한, 제주 해녀어업 등 우수한 해양수산 전통지식을 보전, 확산하기 위해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세계중요농어업유산(Globally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s, GIAHS) 등재 지원 및 관광 컨텐츠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단위 : 억 원, 년도)

공약	예산	완료 시점
05. 일자리·부가 소득원 창출,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어촌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	12,400	2029
06.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어촌 지역의 청년 유입 지원	60	2025
07. 제주 해녀 등 해양수산 전통지식 및 문화유산의 보호와 활용	40	2025

Sustainable Fisheries 3.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어업을 통한 경제발전을 지원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2023년 한-태평양도서국 해양수산 국제협력 컨퍼런스, 2024년 한-아프리카 해양수산 국제협력 컨퍼런스, 세계어촌대회를 통해 개도국과 협력을 논의해왔다. 이러한 논의를 기반으로 개도국의 수요와 여건에 맞는 맞춤형 수산 양식기술을 개발·보급, 수산물 생산·유통 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교육훈련, 해양 위성을 활용한 IUU 대응 역량 강화 등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단위 : 억 원, 년도)

공약	예산	완료 시점
08. 키리바시 지속가능한 어촌발전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소형부두 개발 및 어업훈련센터 구축 지원	168	2029
09. 기후변화 및 식량안보 위험에 처한 내륙개발도상국의 내수면어업 및 양식산업 개발 지원	68	2028
10. 투발루 어촌마을 자립 능력 강화 등을 위해 지붕형 태양광 패널을 접목한 어업훈련센터를 건설하고, 전문기술 교육 실시	73	2026
11. 가나 여성어업인 대상 가공 및 유통 역량 교육을 통해 수산 자원 낭비 최소화 및 부가가치 창출 지원	40	2026
12. 키르기스스탄공화국 수산양식 역량 강화를 위해 국립수산양식개발센터를 설립하고, 시범 운영 지원	50	2026
13. 탄자니아 위성탐사 기술을 활용한 불법어업 감시 체계 구축 및 해양데이터 확보를 위해 해양수산 위성활용센터 설립 지원	55	2029

Sustainable Fisheries 4.

글로벌 투명성 헌장(Global Charter for Fisheries Transparency)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단계적 이행에 노력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아시아 유일의 국제 불법어업 근절 행동연합(IUU Fishing Action Alliance)의 일원으로서, 2023년 3월 채택되고, 지난 9차 OOC에서 발표된 글로벌 투명성 헌장(Global Charter for Fisheries Transparency)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동 헌장의 전 세계 확대 노력에 동참하고자 한다.

대한민국은 IUU 어업 근절을 위해 갖추어진 현재의 법 제도에 더하여, 전자모니터링(Electronic Monitoring, EM) 기술 개발·고도화, 투명한 수산물 유통을 위한 어획증명제도 확대 시행 등 글로벌 어업 헌장의 준수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글로벌 투명성 헌장의 단계적인 이행 추진과 함께, 과학 기반 자원관리(Harvest Strategy), 생태계 및 해양 환경 보호, 감시·감독·통제(MCS) 강화 등 글로벌 지역수산관리기구(RFMO)의 핵심 업무의 성공적 추진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RFMO 미협약 수역인 남서대서양 FAO 41 해역에서의 우리나라 모범사례(자발적 옵서버 승선, 어선 위치추적장치 장착, 일일 전자조업보고 및 양륙·전재 보고 등)가 국제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단위 : 억 원, 년도)

공약	예산	완료 시점
14. 글로벌 투명성 헌장(Global Charter for Fisheries Transparency)의 중요성 공감 및 단계적 이행 노력	-	-
15. 지역수산관리기구(RFMO)를 통한 자원관리 강화 기여	-	-

블루 이코노미

블루이코노미는 해양과 연안 자원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활용하여 경제 성장과 삶의 질 향상, 환경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는 경제 체제를 의미한다. 경제적 목표와 환경 목표 간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해양의 통합적 관리가 더욱 요구된다.

대한민국은 해양공간계획(MSP) 도입을 비롯하여 통합적 해양 관리를 선도하고 있으며, 해운·조선 및 디지털 분야에 강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경쟁력을 토대로 혁신적인 해양경제 모델을 창출하는 한편, 그 성과를 전세계에 공유하여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블루 이코노미**를 위해 **4개의 목표 아래 1조 1,461억 원 규모의 14개 행동**을 약속한다.

Blue Economy 1.

과학과 데이터 기반의 해양관리 수단을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국제사회에 공유·확산시켜 나갈 것이다.

대한민국은 2019년부터 해양공간계획을 도입하여 해양공간을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경험을 기반으로 국제사회 및 개별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며 해양공간계획의 확산에 기여해 나갈 것이다.

또한, 해양수산 위성계정을 조속히 도입하여 해양경제 규모를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이에 기반하여 해양 정책을 수립·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통합적 관리수단들은 환경과 조화롭게 해양을 개발·이용하는 기반이 될 것이며, 나아가 해양 활동의 생태적·경제적 가치를 과학적으로 평가·측정함으로써 관련 투자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단위 : 억 원, 년도)

공약	예산	완료 시점
01. 해양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해양 위성계정 도입 확산	18	2030
02. 해양공간계획(MSP) 지식공유 및 확산 지원	-	2030

Blue Economy 2.

해양 신재생 에너지, 해양 생태관광 등 해양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성장 기회를 모색한다.

대한민국은 「해상풍력특별법」 시행(2026. 3)으로 국가주도 계획입지 체계를 전면 도입함으로써 해양공간관리의 틀 안에서 질서있는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해양생태공원, 갯벌생태마을 등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해양 생태관광을 활성화할 것이다. 이를 통해 환경 보호와 지역 사회의 발전을 동시에 이루는 지속가능한 해양경제 발전 모델을 모색할 것이다.

(단위 : 억 원, 년도)

공약	예산	완료 시점
03. 해상풍력 발전 사업의 先계획-後이용 체계 구축 (국가주도 계획입지 체계 도입, 어업인 등 이익공유제)	-	-
04. 청색경제 기반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망 조성을 위해 파력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200	2027
05. 자연보전과 관광이 조화로운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관광 활성화	-	2030

Blue Economy 3.

디지털 기반 해양경제로의 혁신적 전환을 추진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우리의 해양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해양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자 한다. 해상물류, 수산양식 등 전통적인 해양수산업에 AI를 비롯한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생산성 향상, 환경 영향 저감,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등의 성과를 이끌어낼 것이다.

자율운항선박, 국제 해양 디지털 항로 기술, 스마트 항만, 스마트 양식 등 각 분야별 기술개발과 디지털 전환을 통해 산업 생태계의 혁신과 해양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속화하며 글로벌 해양경제 발전을 선도하고자 한다.

(단위 : 억 원, 년도)

공약	예산	완료 시점
06. 선박 안전을 극대화하고 탄소배출을 최소화하는 자율운항선박 개발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동참	1,603	2025
07. 선박 친환경, 디지털 전환 선도를 위한 친환경 실습선 건조	809	2028
08. 선박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하는 국제 해양 디지털 항로 기술개발 및 실증 추진	119	2028
09. 스마트항만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	7,603	2029
10.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206	2029

Blue Economy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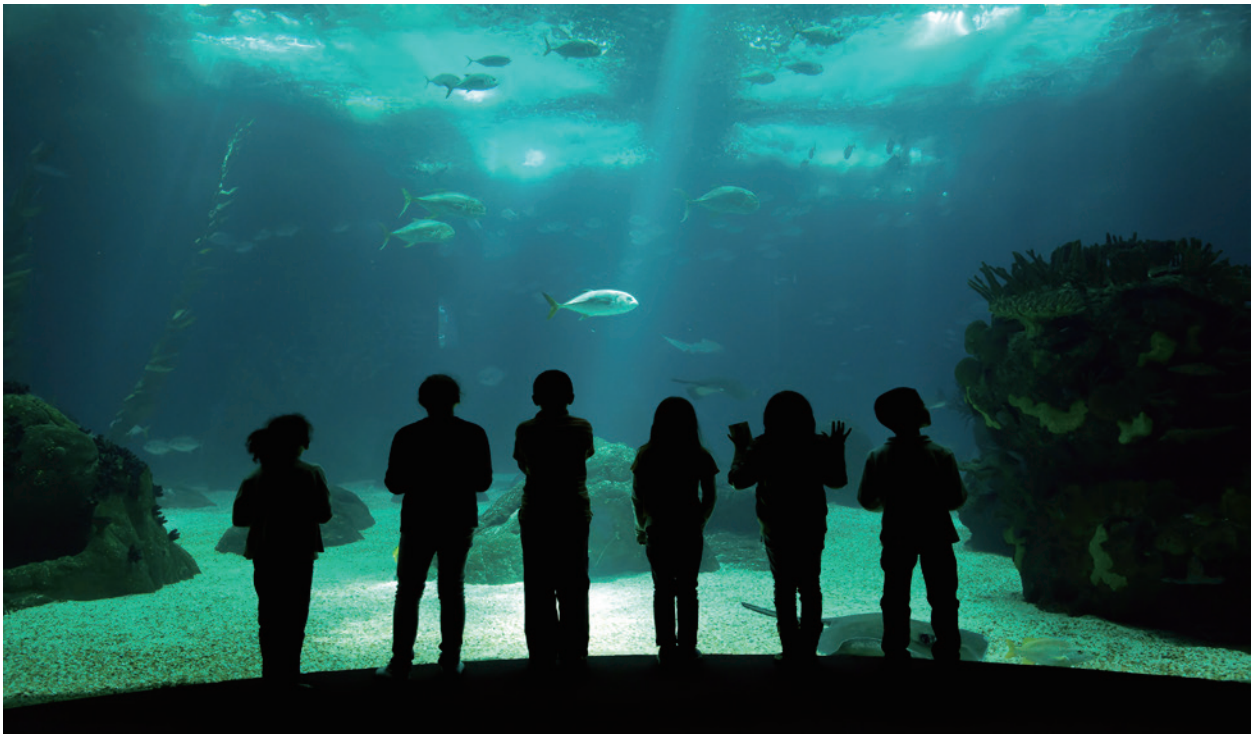
해양교육 및 문화 접근성을 확대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해양의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리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영유아, 초중고, 대학 및 성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해양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다. 또한, AI 기술을 활용한 교육 플랫폼을 개발하여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에도 노력할 것이다.

주요 해양 도시에 해양 역사와 문화에 친숙해질 수 있는 박물관과 체험시설을 건립하고, 국제 해양문화 교류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은 해양분야의 우수한 인력의 양성은 물론, 해양쓰레기 등 해양 현안의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행동을 촉진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단위 : 억 원, 년도)

공약	예산	완료 시점
11. 생애주기 맞춤형 해양교육 확대	22	2025
12. 오션리터러시 AI 플랫폼 개발	30	2030
13. 해양박물관 및 해양문화 체험시설 확충	801	2025
14. 해상실크로드 네트워크(국가 간 해양문화 교류) 구축	50	2030



3개 목표

2,514억 원

13개 행동

© 전라남도

해양오염

매년 전 세계적으로 약 1,100만 톤의 플라스틱이 바다로 유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해양 생태계 오염의 경제적 비용은 연간 약 130억 달러에 달한다.[1]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인 환경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해양플라스틱 폐기물 문제의 심각성에 주목하며 적극 대응해왔다.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범부처 협의체인 해양폐기물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방정부·민간기업·시민사회·연구기관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해양 폐기물 저감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지속해왔다.

1) https://www.un.org/en/conferences/ocean2022/facts-figures

대한민국은 **플라스틱 없는 청정한 바다를 구현**하기 위해 **3개 목표 아래 2,514억 원 규모의13개 행동**을 약속한다.

Marine Pollution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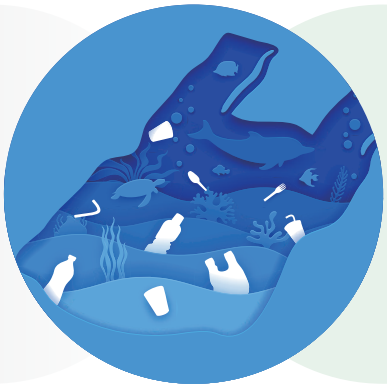
해양플라스틱을 포함한 해양폐기물의 전주기 관리를 강화할 것이다.

해양폐기물의 발생 예방, 수거·처리, 재활용에 이르는 전주기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해 관리 역량을 고도화할 것이다. 실태 조사를 기반으로, 하천을 통해 유입되는 육상 폐기물을 차단하는 시설을 확대하고, 첨단 기술력 기반의 부유쓰레기 수거 로봇을 시범 도입하며, 친환경 해양 폐기물 수거 장비를 개발하는 등 도전적 과제를 수행하여 해양쓰레기 수거 체계의 혁신을 이루어 낼 것이다.

아울러, 해양환경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 해양 유해물질 오염원 추적, 위험유해물질(HNS) 관리 기술, 해양미세플라스틱의 전파 기전과 위해성 규명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 개발을 통해 과학적 관리 기반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특히, 10년간에 걸쳐 집중적으로 연구해온 해양미세플라스틱 분야의 성과는, 향후 동 이슈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고, 국제 기준을 마련하는 등 국제 사회의 적극적인 행동을 유도하는 데 공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위 : 억 원, 년도)

공약	예산	완료 시점
01. 부유쓰레기 수상 로봇 시범사업	미정	미정
02. 하천유입 차단시설 시범 도입	미정	미정
03. 하천 유입 해양쓰레기 실태조사	2	2025
04. 부유쓰레기 친환경 선박 개발 및 실증	469	2026
05. 해양 위험유해물질(HNS) 배출 등 관리기술 개발	400	2028
06. 해양 유해물질 오염원 추적기법 개발	174	2026
07. 해양 미세플라스틱 오염 대응 및 관리기술개발	301	2028



MARINE POLLUTION

Marine Pollution 2.

국제 해양 오염 저감을 지원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작년 11월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를 부산에서 개최한 것을 포함하여 그간 UN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특히 우리 정부는 정부간 협상 과정에서 폐어구 등 해양플라스틱 폐기물의 관리 강화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였다.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해양폐기물 문제는 국경을 초월한 국제적인 협력이 필수라는 인식하에 우리의 경험과 정책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공동의 대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다. 선박에서 기인하는 해양플라스틱을 저감하기 위해 IMO와 지역 특성에 적합한 폐기물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IUCN와 협력하여 태평양 소도서국에 플라스틱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인프라를 계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또한 한국의 해양플라스틱 전주기 관리 모델을 공유하고, 현지 상황에 맞게 개발하는 사업을 PEMSEA와 함께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해양플라스틱 분야의 국제적 공조체계 구축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단위 : 억 원, 년도)

공약	예산	완료 시점
08. UN 해양플라스틱 협약 대응	-	-
09. 태평양소도서국 플라스틱쓰레기 대응체계 구축 지원	50	2028
10. 해양투기로 인한 해양오염 방지 분야 글로벌 전문가 양성	104	2028
11. 동아시아해역 해양플라스틱 저감사업	120	2028

Marine Pollution 3.

혁신적이고 전면적인 어구 순환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폐어구는 해양오염 뿐만 아니라 해양생물의 생명과 선박의 안전에도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2024년 세계 최초로 도입된 '어구·부표 보증금제'를 확대 운영하여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폐어구의 회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어구 유통·사용부터 사용 후 수거, 처리, 재활용까지 어구의 전주기 관리를 강화하여 2028년부터 유실·침적 폐어구 발생 제로화를 달성하고, 수산자원 보호, 해양오염 저감과 함께 선박 운항 안전성 제고를 동시에 이룰 것이다.

(단위 : 억 원, 년도)

공약	예산	완료 시점
12. 세계 최초 어구·부표 보증금제 확대 운영	84	2026
13. 유실·침적 폐어구 발생 제로화를 위한 어구 전주기 관리 강화	810	2027

해양보호구역

해양생물다양성은 식량공급, 기후조절 및 탄소흡수, 문화·여가 기회의 제공 등 다양한 해양생태계 서비스를 통해 인류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제사회는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2030년까지 육상 및 해양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목표('30 by 30')를 설정하고, "국가관할권 이원해역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BBNJ) 협정"에 합의했다.

대한민국은 **30 by 30 목표 달성**을 위한 **3개 행동**을 약속한다.

Marine Protected Areas 1.

BBNJ 발효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2025년 3월 19일에 동아시아 최초로 BBNJ를 비준하였다. 이에 더하여 국제사회의 정치적 동력 마련, 국가간 협력 등을 통해 BBNJ 발효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

Marine Protected Areas 2.

국내 해양 보호구역을 지속 확대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2030년까지 전체 해양면적의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규모 1천 km^2 이상의 대형 해양보호구역을 2030년까지 매년 1개소 이상 신규 지정해 나갈 것이다.

2025년에는 해초류(수거머리말), 산호류(해송, 긴가지해송, 둔한진총산호 등)의 서식지로서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제주 관탈도 주변해역(1,075.08 km^2)과 상괭이(해양보호생물) 등 해양포유류의 서식지이자 섬개개비(멸종위기 2급) 등 멸종위기 야생 생물의 서식지인 서해 중부 무인도서 주변해역(약 1,600 km^2)을 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할 것이다.

Marine Protected Areas 3.

공해(公海)상 해양보호구역 확대에 기여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웨델해 1단계 및 동북남극해 해양보호구역 공동발의국으로서 동 제안서 채택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SPRFMO) 내 살라 고메즈 및 나스카 해저융기부(Salaz y Gomez and Nazca Ridge) 수역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태스크 그룹에도 적극 동참할 것이다. 또한 북태평양수산기구(NPFC) 내 논의 중인 황제해산에 대하여 최상의 과학적 정보에 따른 적절한 보호수단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다.

(단위 : 년도)

공약	예산	완료 시점
01. 동아시아 최초 BBNJ 비준에 이어 BBNJ 협정 발효를 위해 노력	-	2025. 06
02. 2030년까지 매년 대형 해양보호구역 1개소 이상 신규 지정	-	2030
03. 공해(公海)상 해양보호구역 확대에 기여	-	2030

해양안보

해양은 인류 공동의 자산이자 경제, 환경, 안보가 교차하는 공간이다. 끊이지 않는 해적 사건, 해상 불법 거래, 테러 등 해양 안보 위협은 안정적 해상 공급망과 해양 활동에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이해당사자들 간 연대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대한민국은 최근 선사·선박을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이 발생하는 등 해양안보 환경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2024년 10월 '해사 사이버 안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선사·선박의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과 훈련, 법 제도 마련, 핵심기술 개발 및 상용화 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세계 바다의 안보역량 강화를 위해 대한민국은 다음 **2개 행동**을 약속한다.

Maritime Security 1.

해적 및 해상불법행위 방지를 통해 글로벌 해양질서 형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국제기구, 국내·외 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실시간으로 해적 사건, 테러 정보 등을 이해당사자들과 공유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경험을 기반으로 특히, 해적 사건이 잦은 서아프리카 지역에 교육·훈련 센터를 구축하여, 인근 국가의 해적 퇴치 역량을 강화하는 데 보탬이 되고자 한다.

Maritime Security 2.

AI 기반의 선박 상황관리 기술개발로 전세계적 해양안보 증진에 기여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AI 기반의 선박 상황관리 기술개발로 전 세계 바다의 대한민국 선박에 대한 신속·정확한 상황관리와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해당 시스템의 개발과 확산을 통해 전 세계적인 해양안전과 안보 증진에 기여해 나갈 것이다.

(단위 : 억 원, 년도)

공약	예산	완료 시점
01. 기니만 해적 및 해상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연안국 역량강화 지원	46	2029
02. AI 기반 선박 디지털 상황관리 기술개발	250	2030

OUR OCEAN
Busan, KOREA, 28-30 April 2025

Korea
Blue Action Plan

해양수산부